# '대학원생 갑질 사망' 진상규명 연대 움직임 확산

민변·유족 "전남대 진상조사 결과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단체·노동조합·학생 등 연대…"대학원생 지위 보장" 요구 잇따라

전남대 대학원생 A(24)씨가 갑질 피해를 호소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전남대에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 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 내 구성원뿐 아니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에서도 유가족들과 연 대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전남대도 이근배 총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 부는 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일대에 서 A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이날 전남대 총학생회, 전국대학원생노 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 명의로 성명 을 내고 "전남대의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 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A씨가 사망한 사건은 대학교 연구실의 구조적 문제와 교수들의 갑질로 인한 젊은 대학원 생의 비극이다"며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교수 들의 갑질을 방지해야 할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반 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뒤늦게서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 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 으나,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더 이상 젊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갑질 과 학교의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남대는 조속히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인권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가해교수들을 징계하 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는 A씨의 유가족들도 참석해 전남대의 책임을 촉구하고, A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 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씨 유가족은 "가해 교수들은 숨진 형을 학생으 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 자신들도 똑같은 길 을 걸어왔다던 그들이 잘못된 것을 모를 리 없으면 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며 "산재 신청을 통 해 대학원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배하는 구조 관행 을 없애고자 한다. 민사, 형사, 학교의 징계 등 모든 절차로 이 잘못을 세상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A씨 유가족은 전남대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근로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A씨 유가족은 지난 3일 전남대 내부 커뮤니 티인 '에브리타임'에도 A씨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산재 신청 계획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3일 사이 765개 '공감'을 받으며 인기 게시물로 등

해당 게시물 댓글란에서는 A씨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학원생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연대 의지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전남대생은 댓글에 "저 또한 담당교수 때문에 직전 학기까지 오래도록 힘들었기에, 얼굴도 모르

는 고인 분의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며 "유가 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평생을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고 썼다.

또 다른 전남대생은 "저 또한 일부 교수들에게 공 공연히 고소 언급을 했던 피해자다"며 "산재 인정을 꼭 받아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 시대가 바뀐 만큼 의식도 바뀌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밖에도 해당 글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 원생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연대하고 지지 한다", "응원한다"는 등 댓글이 50여개 넘게 달리면 서 학생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3일 지도교수 C씨와 연 구교수(박사) D씨로부터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현재 C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D씨는 강요 혐의 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학생인건 비를 회수해 관리토록 하고 논문 저자를 허위로 표 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울산 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작업자 7명 매몰·2명 구조

**광주일보** 

울산시에서 철거 중이던 화력발전소의 보 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6일 울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 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 조했으며, 오후 7시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 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 다.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철재 구조물로 지 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에는 발파업체가 동원됐으며, 현재 매 몰된 작업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추 정된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 다. 30년가량 사용되다가 노후화해 철거가 결

### 실형 확정되자 신분 세탁하고 도주・잠적 광주지검, 사기 20대 1년 5개월만에 검거

제적등본 이중 등록 확인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자 신분을 세탁하고 1 년5개월여간 도주·잠적한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도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 A(24)씨를 검거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 고받은 뒤 구속 전 잠적·도주한 사람을 가리킨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차인 노릇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청 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대 출을 받은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으며,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하지만 A씨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잠적하면서 형 집행이 미뤄졌다.

A씨는 당초 호적상 가족이 없고 휴대전화 등 신 병을 추적할 단서를 남겨두지 않았던 터라 광주지

검이 추적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광주지검은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제적등본이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고아원 에서 등록한 것과 생부(生父)가 등록한 것 등 성 씨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두 개 의 등본이 등록돼 있던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고아원에서 퇴소하면서 생 부와 재회했고, 이후 A씨로 등록된 제적등본을 말 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말소된 기존 이름으로 재판을 받은 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판결의 피고인 인적사항을 경정 신 청하고 지난달 30일 대전시 일대에서 A씨를 검거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 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한 황토고구마밭에서 농민들이 고구마 수확에 한창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수해복구 현장 작업자 사망' 강진원 강진군수 경찰 조사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강 군수와 강진군 작천면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 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강 군수가 지난해 9월30일 강진군 작천면의 한 농로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50대 작업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강진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무너지면서 굴착기와 함께 3m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 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대출 브로커에 수사기밀 누설' 전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광주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기 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 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소속 A (51·직위해제) 수사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광주 동양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 의를 받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과 9월 대출브로커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브로커와 그의 변호인에 대한 압 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하고, 같은 해 10월에 는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출 브로커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수사관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 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 취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 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사건이 분리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손해보험협회

IGAA LANGA SA